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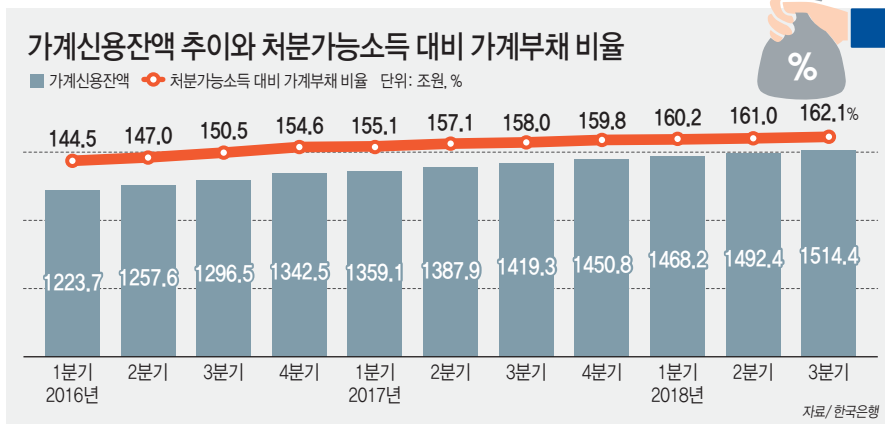
“1500조 암세포, 성장·소비로 전이 막아라”... 핀셋 제거를

(가계부채)

2019 위기를 경영하라

부채의 역습

가계부채 증가율 둔화세지만 여전히 소득보다 빠르게 확대
주담대 규제에 신용대출 급증
경제성장·소비에 부정적 영향



한국 경제의 ‘뇌관’이라 할 수 있는 가계부채는 1500조원을 넘어섰다. 부채규모는 국내 경제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둔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소득보다 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신용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로 가계부채의 상환부담은 증가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향후 경제성장이나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가계부채를 둘러싼 경제 여건이 바뀌고 있는 상황

에서 과잉 부채의 누적에 따른 충격은 점점 커질 것이라 분석했다.

◆가계부채 1500조원... ‘풍선효과’ 우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3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가계신용(가계대출+판대신용)잔액은 1514조4000억원으로 2분기보다 22조원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높은 편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5.2%였다. 한은이 지난달 8일 국회에 제출한 ‘2018년 11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도 지난해 2분기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8.7%에 달했다. 가계부채 규모가 국내 경제 규모와 거의 비슷한 셈이다.

가계부채는 2007년 말 631조원에서 10년 만에 2.3배로 늘어났다. 2016년에는 139조원 늘어나 명목 GDP 증가폭의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7년(108조원↑) 이후 증가율이 둔화됐으나 여전히 소득 대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가계부채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6.7%로 같은 기간 가구원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명목소득증가율 4.6%보다 높았다.

1분기 가계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BIS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이 12.2%로, 2011년 말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한은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처분가능소득의 약 1.6배다.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2018년 시행된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정책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난해 3분기 기준 기타(신용)대출이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했다.

앞서 정부는 6·19 대책, 8·2 대책 등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추고 대출심사를 간간하게 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난해 10월에는 2018년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조기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민간소비 억제...가계부채 상환부담 확대
가계부채의 높은 증가세와 신용대출 확대 등은 경제성장이나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KDB산업은행이 발간한 산은조사월보 ‘2019년 국내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민간소비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복지지출 확대에도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대출 원리금상환 부담 증가 등으로 2.6%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의 영향으로 가계의 빚 상환부담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 실제로 지난 2017년 9월 이후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신용대출 금리는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미국은 올해 3차례 금리인상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내 금리인상 압력이 커지고 가계부채의 상환부담이 증가할 것이라 분석했다.

오세진 산업은행 미래전략개발부 연구위원은 “가계부채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최근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상환 부담이 점증하고 있다”며 “또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저소득층의 추가 차입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은 가계소비 증가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정희 KB증권 연구원은 “금융부채를 보유한 차주는 소득의 38.8%를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지출하고 있어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은 계속 늘고 있다”며 “올해 대내외 경제상황 악화로 성장률이 올해보다 둔화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가계의 소득을 저하시켜 채무상환 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amp;퍼어스(S&P)는 “GDP의 95%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경우 금리가 오르고 가계소득이 떨어지면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기해년 첫날 코스피 2,010 마감
2일 새해 첫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1.04 포인트(1.52%) 내린 2,010.00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6.28포인트(0.93%) 내린 669.37로, 원/달러 환율 3.33원 오른 1,119.0원으로 마감했다. 사진은 이날 명동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관련기사 3면) /연합뉴스

한국지엠, R&D 법인 공식출범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운영

한국지엠(GM)이 2일 연구개발(R&D) 법인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의 법인 설립 등기를 실시한 뒤 공식 출범했다.

한국GM에 따르면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는 이날 신설 법인 설립등기를 마치고 공식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기존 한국GM 전체 인원 1만3000명 가운데 엔지니어링과 디자인 부문 인력 3000여명이 신설 법인으로 소속이 변경됐다.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는 이날 출범식 등 공식 행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한국GM 생산직과 사무직을 비롯해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소속 직원들 대부분이 이번 주까지 휴가이기 때문에 사무식이나 경영진 신년 인사도 별도로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GM 관계자는 “신설 법인이 이날 공식 운영에 들어갔지만 직원들 휴가가 끝나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일부 조직개편만 있을 뿐 사무실 등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직원들이 체감하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는 앞으로 미

국 제너럴모터스(GM)로부터 배정을 확정받은 차세대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새로운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CUV) 등 2종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주도하게 된다.

초대 대표이사로는 로베르토 램펠 GM 수석 엔지니어가 선임됐다.

그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GM의 모든 소형 SUV와 경차 플랫폼 차량개발을 책임지는 동시에 아시아 지역의 GM 글로벌 제품 프로그램 부문을 이끌고 있다.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출범과 함께 중단됐던 신규 인력 채용도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앞서 한국GM은 작년 7월 R&D 법인 설립 계획을 밝히면서 신규 차량 개발 업무 수행을 위해 100명의 엔지니어를 채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신설 법인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관련 절차를 중단한 상태였다.

한국GM은 법인 분리 작업을 마무리함에 따라 내수 시장에서의 판매 회복 등 경영정상화에 다시 시동을 건다는 계획이다.

당장 한국GM은 새해부터 스파크, 트랙스, 이쿼녹스, 임팔라 등 주요 차종 가격을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인하하는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내놓았다.

/정연우 기자 ywj964@

사상최대 실적낸 저축銀, 올 전망 ‘안갯속’

정부, 올 법정최고금리 인하 전망
DSR 등 규제에 수익악화 불가피

지난해 사상최대 실적을 낸 저축은행이 실적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에도 법정 최고금리는 더 내려갈 것으로 전망돼서다. 게다가 서민금융이란 취지에 맞게 정부의 규제도 강화되고 있어 올해 저축은행의 수익악화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1~9월) 기준 국내 저축은행 79개사 전체 누적 순이익은 8513억원을 기록했다. 2017년 같은 기간(8218억원)보다 3.6% 증가한 규모였다. 저축은행이 벌어들인 이자이익은 총 3조984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3.3%(3640억원) 늘었다. 지난해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0%로 인하됐지만 대출거래가 확대되면서 이익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올해다. 저축은행 업계는 지난해 만큼의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지만 법정 최고금리는 더 내려갈 전망이다. 지난해 정부는 법정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24.0%로 인하고, 하반기 기준 대출자

“청년일손 부족... 노인·외국인 고용 늘어”

>> 1면 ‘일자리노믹스를 엿보다’서 계속

박 지부장은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오히려 일자리는 많은데 기업·상점들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특히 청년 일손이 부족해서 노인들이나 외국인 고용이 크게 늘었다. 비정규직과 파트타임, 임시직 등도 많아졌다”

(2018 3분기 저축은행 누적 손익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17년 ('17.1~12월)	'17.1~9월 (A)	'18.1~9월 (B)	증감 (B-A)	증감률	
영업손익(A=a+b-c-d)	12,009	9,389	10,168	779	8.3	
비용	이자이익(a)	37,409	27,345	30,984	3,640	13.3
	비이자이익(b)	△2,697	△1,660	△2,022	△362	△21.8
	판매및관리비(c)	11,638	8,514	8,998	484	5.7
	대손충당금전입액(d)	11,064	7,781	9,796	2,015	25.9
영업외손익등(B)	△1,247	△1,170	△1,655	△485	△41.4	
당기순이익(A+B)	10,762	8,218	8,513	295	3.6	

/자료=금융감독원

도 낮아진 금리를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금리 인상 기조와 반대로 2금융권 여신금리는 점점 내려가고 있는 추세”라며 “현 정부가 당초 약속한 ‘연 20%’ 수준의 법정최고금리 이하 공약을 지키기 위해 내년 더 한 차례 금리 인하를 추진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상반기부터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한 규제에 따른 수익악화 우려도 적지 않다. DSR은 차주의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한 후 연 소득으로 나눠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소득이 적은 중저신용자가 찾는 2금융권의 특성상 DSR이 적용되면 가계대출 제공은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저축은행 대손충당금 적립기준률도 최대 3%포인트까지 상향조정되면서 저축은행의 이익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대손충당금은 부실에 따른 회수불능 추산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2단계인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2020년까지 연간 3단계로 강화될 예정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경제상황도 좋지 않고, 특히 올해는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금리인하 요구권 법제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도입돼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적게 벌더라도 박리다매식으로 중금리 대출이나 기업대출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유리 기자 yul115@

의 사업소 1만158개의 비정규직 87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제도가 있는 회사는 24.4%에 불과했다.

일본에서 20년째 한국어 통역 업무를 하는 A씨는 “이곳은 구인난이 심각해 청년들의 취업문이 넓은 편이지만 그만큼 비정규직도 많다”며 “일본 내에선 일 자리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했다.

/도쿄(일본)=채신화 기자 csh9101@

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 곳곳의 지하철역, 편의점, 슈퍼 등에 구인 광고지인 ‘Jobaidem’ 등이 놓여 있었다.

그러나 구인 광고지에는 경비, 운전, 청소, 판매 등 임시직 또는 계약직을 구하는 광고가 다수였다.

후생노동성이 2017년 9~11월 5인 이상